



불법자금용 피해신고센터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자금용 피해신고센터에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뉴스시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품질평가'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G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감점률인 45%가 적용돼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이동통신사는 "최악은 면했다"며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이달 예고된 '5G 품질평가'에 이동통신사는 긴장을 놓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평가'가 공개된다. 지난해 첫 상용화된 5G 서비스에 대한 이동통신사별 품질 평가가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아닌 정부 주도의 첫 공식 발표 5G 선두 자리두고 이통사 성적표 주목 연말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확정

지난해 상용화된 5G는 제조사가 '갤럭시S20' 등 단말을 쏟아내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5G 가입자는 687만6914명으로 전월보다 53만6997명 증가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0%가 5G 단말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5G 이용자는 지하철이나 실내에서 5G가 LTE로 자동 전환되는 등 끊김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는데도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긴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올해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55건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1이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내용인 것



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은 공신력 있는 5G 성적표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5G 선두에 섰으며, 품질 경쟁을 벌여왔던 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G 품질평가 결과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동통신사에 설비투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는 애초 올 상반기 4조원의 자금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가 올 1~4분기에 지출한 설비투자(CAPEX)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 줄어든 총1조881억원이다.

연말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도 확정해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내년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3G·4G(LTE) 주파수를 이통 3사에 재할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역별 이용기간과 가격 등의 세부사항을 11월 말까지 마련해 이통사가 연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해당 주파수의 경매가를 반영하게 된다면, 최대 3조원까지 주파수 대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비용이 과도하게 높으며,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여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R&D 지원금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간 국가사업 참여불가

과기정통부 R&D 혁신법 시행령

R&D 환경조성 등 필요사항 규정 8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실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부정사용 금액규모 따라 제재

내년부터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정 사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R&D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 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구기관이나 개인이 R&D 사업 지원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위반해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다른 R&D 사업에 6개월~2년까지 참여할 수

없으며, 1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과기정통부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제재부과금 부과액 (위반사용 금액 기준)		참여제한 기간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개인인 경우	
1000만원 이하	100%	100%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년 초과 4년 이내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			4년 초과 5년 이내
1억 초과 5억 이하	1억+1억 초과금액의 150%	1억+1억 초과금액의 150%	5년 초과 7년 이내
5억 초과	7억+5억 초과금액의 200%	7억+5억 초과금액의 200%	7년 초과 10년 이내

이하의 2~4년까지,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의 4~5년까지, 1억원 초과 5억 이하의 5~7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또 부정사용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재부과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사용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만 부과되지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과 더불어 1억원 초과금액의 150%도 부과되며, 5억원을 넘어설 경우 7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200%까지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는 위반 금액만큼만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하기로 해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전에는 전체 연구비 1억원 중 100만원만 부정 사용했어도 1억원을 전부 환수했지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해당되는 100만원만을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바뀌 더 합

리적으로 변경됐다.

또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제재를 했는데 그동안 제재가 부처마다 상이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R&D혁신법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 연구자를 한번 더 검토하는 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돼 더 공평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그린뉴딜 발판 삼아 분산전원 체계 마련해야”

제2차 전력정책포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 미래 토론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중요”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판 삼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전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제2차 전력정책포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들어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기후변화 등에 의해 에너지산업의 뉴노멀 시대 대응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너지산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에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주요한 축은 '그린 뉴딜'이다”며 “전력분야는 석탄과 원자력 등 중앙집중형 방식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구조로 바꾸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깊이 들어가보면 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력정책포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박호정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술적인 문제가 많다. 이에 제도로 막혀 있는 대목도 있지만, 이 같은 틈새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혁 한전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쳐 올해 전세계 에너지 수요는 6%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70년 기간 중 가장 큰 감소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충격의 7배”라며 “올해 글로벌 전력 수요도 전년 대비 5% 감소하고, 일부 지역은 10~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로는 공공성을 갖춘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발전원가의 투명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지역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생산부터 조달, 설치, 인허가,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 2050년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야 한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